

日·EU 배터리 동맹… 정부협력·R&D 부족 韓, 경쟁력 위기

일본·EU, 재활용·인력 양성 협력
정상회담서 ‘경쟁력 동맹’ 공식화

한국, 기업 대응만론 역부족
핵심원료 등 중국 의존도 여전히
“유럽시장 선점, 정부역할 관건”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함에 따라 현지 생산을 늘리는 국내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유럽연합(EU)과 배터리 공급망 재활용·데이터 공유·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EU와의 추가 협약이나 실행 단계의 지원책이 아직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LG화학 배터리 양극재.

/LG화학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간 공급망 협력 체계가 아직 없어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가 광물 확보

나 현지 재활용 인프라를 지원하면 기업들의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3대 배터리사가 폴란드·헝가리 등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유럽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입지를 넓혀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을 중심으로 삼성SDI는 헝가리 괴드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으며 SK온 역시 헝가리 코마름과 이반차에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은 리튬의 경우 칠레·캐나다·호주 등과 광산 계약을 맺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니켈·코발트 등에서도 아프리카·남미 광산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탈중국’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핵심 원료 상당 부분이 여전히 중국에서 조달되는 구조적 한계는 남아 있다.

일본은 정부 주도로 EU와 공급망 협

력을 공식화하며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과 EU는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와 산업 강화를 위한 ‘경쟁력 동맹’ 출범에 합의했고, 이후 재활용·데이터 공유·인재 육성 등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핵심 광물의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생산의 60~70%, 정제 능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 역시 정제·가공 부문에서 중국 점유율이 70~80%에 달한다. 중국은 2023년부터 고순도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해 공급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이 공급망 붕괴, 기술·원자재 확보 실패 등으로 이어져 경제안보 측면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업계는 한국이 기업 주도만으로는 EU의 재활용 원료 의무화 등 강화되는 배터리 규제와 일본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본이 미쓰비시·파나소닉 등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과 협력을 강화하면 한국 기업이 뒤처질 수 있다”며 “나트륨이온·전고체 등 차세대 기술은 초기 개발비가 막대하고 국제 협약이나 공동 연구에도 국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해 기업에만 맡기기 어렵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해야 일본의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재활용 분야 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현지 재활용 기술 강화와 소재 내재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CBAM 시행 3개월 전… 철강업계, 10년간 2.6조 부담 ‘불가피’

EU, 탄소산정·공제안 이달 의견 수렴
전기로·수소환원 등 탈탄소 전환 가속
저탄소 제품 확대…시장 대응 분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유럽연합(EU)이 해외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내 철강업계에는 사실상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부 부과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인증서 비용은 약 851억 원으로 추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달 28일 CBAM 상품 배출량 산정 방식, EU ETS(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무료 할당 반영 규칙, 제3국 탄소 비용 공제 규칙 등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핵심은 두 가지다. EU 철강사에 지급하던 무료 배출권이 사라지는 만큼 수입



동국제강 인천공장의 한 직원이 에코아크전기로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

/동국제강

업체 제출 인증서를 줄여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것과 수출국에서 이미 낸 탄소 비용을 인정해 이중부담을 막는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달중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초안을 회원국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최종

채택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내년 국내 철강업계 CBAM 부담액은 약 851억 원, 오는 2026~2034년 누적 부담은 2조64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4개사의 영업이익의 합계 2조2790억원과 비교하면 단기 영향은 영업이익의 3.7% 수준이다. 그러나 오는 2034년에는 연간 부담이 5500억원으로 불어나 영업이익의 24% 수준까지 치솟게 된다. 단순한 비용 항목을 넘어 산업 체질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철강업계는 이미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중국발 저가재 공세, 미국·EU의 통상 압박,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CBAM까지 더해지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기업들은 저탄소 전환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제철은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동국제강은 차세대 전기로와 친환경 제품 확대에 집중하고, 세아제강은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을 강화한다. 방식은 다르지만 탄소 배출을 줄여 유럽 시장 진입 장벽을 넘겠다

는 목표는 같다.

정부 역시 한국형 CBAM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배출권거래제(ETS)와의 연계, 국제 동향 분석이 동시에 진행된다. 국회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발의돼 수소 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공정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미국과 일본도 수십 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저탄소 공정 비중을 확대해왔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AM 시행으로 탄소 배출 저감이 더욱 절실해진 만큼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기술 혁신 투자 지원과 국제 표준 제정 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com

“산업·안보 아우르는 종합 전략 필요”

한경협, 디지털 통상 현안 진단
지도·클라우드·망 사용료 등 쟁점
민관 공동 대응 전략 시급 강조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판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함께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우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통상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경제 안보와 국가전략이 맞물린 핵심 과제”라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모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미국발 통상 압력 속 산업계의 경쟁력과 실익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특히 디지털 통상은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분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 전반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합쳐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협력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와 진단’ 발표에서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제도가 자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역 차별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의 높은 진입 장벽, 통신사 중심의 망 사용료 부과, 플랫폼 규제 강화 등이 해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되 매년 발간되는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길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국가들의 대처 방식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도 ‘디지털 통상 도전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발표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환경 만들어야”

李 대통령, 청년 스타트업과 소통
재대전 펀드 1조, “규모 적다”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스타트업을 만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창업자 지원 펀드인 ‘재대전 펀드’ 계획 규모 1조원에 대해 “적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 콘서트’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지금은 청년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의 날(9월20

일)’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새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스타트업, 투자자, 관련 협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면서 “옛날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뚝 떨어진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뺨 맞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 기회도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며 “실제 여러 제도를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사업에 한 번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도 많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